

한국의 저출산과 젠더 혁명:
한일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여성의 생애 혁신

사사노 미사에

<국문 초록>

2023년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0.72를 기록하며 2018년 이후 7년 연속으로 1 이하로 떨어지는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왜 한국의 출산율은 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가?’라는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2000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급격한 사회 변화와 그로 인한 가치관 변화를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탐구하였다. 특히 서구 중심의 이론이 한일 간의 출산율 하락 속도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압축적 근대’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젠더 혁명’이 저출산 가속화의 핵심 원인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어머니 세대와 딸 세대 간의 생애과정 변화를 분석의 중심에 두었으며 주요 분석 자료로 일본 내각부가 실시한 「일본과 외국 여러 나라의 청년 의식에 관한 조사」(2018년도)를 활용하고 한국 청년 세대의 가족 가치를 일본 및 서구 사회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젠더 평등 의식과 가족 가치 차이를 비교하고 여성의 교육 성취,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지위, 가족·여성 정책, 남녀의 갈등과 결혼 시장 불균형이라는 4가지 영역에 걸쳐 2000년 이후 양국이 경험한 사회적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90년대생 여성들 사이에서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분석 대상 7개국 청년 중 가장 강한 젠더 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서 발생한 여성의 ‘압축적 고학력화’와 그로 인한 ‘생애과정 혁신’ 그리고 급속한 사회 변화에 기인한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 저하라는 인구적 현상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급격한 구조적 변화와 그로 인한 세대 간, 남녀 간 갈등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형 ‘젠더 혁명’은 젊은 여성들의 가치관과 기존의 전통적 가치관 간의 충돌을 초래하여 결혼과 출산의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저출산은 젠더 평등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기에 향후에도 서서히 하락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요인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압축적 근대’로 인한 여성의 ‘생애과정 혁신’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젠더 평등을 향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인식 전환과 이를 반영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사회 전체가 남녀가 평등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동아시아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동아시아적 분석 틀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주제어: 압축적 근대, 압축적 고학력화, 생애과정 혁신, 가치관 변화, 한일 비교

I. 서론

1. 문제제기

저출산은 전 세계 선진국가들이 직면한 심각한 사회문제다. 특히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¹⁾이 인구 대체 수준을 크게 밑도는 상황이 지속되는 국가들에서는 그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를 통해 인구의 미래 동향을 예측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먼저 이 문제에 직면한 국가이지만 두 나라의 저출산 진행 속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은 1957년에 인구 대체 수준을 처음으로 밑도는 출산율 저하를 경험한 반면 한국은 1983년에 비로소 같은 수준을 밑돌았다(일본; 정부 통계e-Stat²⁾, 한국; 통계청e-나라지표³⁾). 이 26년의 시차는 두 나라의 인구구조나 사회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출산율은 일본보다 급속히 하락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일본을 밑돌게 되었다. 2023년 한국의 출산율은 0.72로 과거 최저치이자 세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일본이 1.20을 기록한 것에 비해 한국의 출산율은 훨씬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 동안 고령화 사회 측면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미래’라는 견해에서 한국이 일본 사례를 참고로 해 왔지만 저출산 측면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미래’라고 봐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출산율은 이토록 급격히 하락하는 것일까?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일본에서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 사회 대책 대강」을 비교해 보면, 양국 모두 저출산의 원인을 주로 경제적 요인(젊은 세대의 고용 및 경제적 불안정성, 자녀 양육비용의 부담)과 문화적 요인(젠더 불평등한 가족 문화 및 노동 시장,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결혼 및 출산 연령의 상승, 가족 가치의 변화)에서 찾는다. 기존 연구도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저출산’ 배경을 늘 가족주의에 근거한 같은 맥락에서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설명논리는 한일 양국의 저출산 배경 요인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지만 양국 간에 존재하는 출산율 하락 속도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한 원인을 탐구하기 위해, 세대 간 ‘생애과정에서의 혁명적 변화’라는 젠더 관점에서,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사회 구조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저출산의 원인은 복합적이기에 많은 요인이 얽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왜 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비교사회학적 접근을 채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한일 비교라는 비교사회학적 접근을 취하는 이유는 한 사회의 특성은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비교는 아리타(有田, 2016: 8-9)의

1)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출산율은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추산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을 가리키며, 가임기 여성(15-49세) 1,000명당 연간 출생아수를 나타낸다. 인구 1,000명당 출생한 아이의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crude birth rate, CBR)을 나타낸 출생률(birth rate)과 구분하여 사용한다.

2) 인구동태조사 「연도별 출생아 수, 출생률(인구 천 명당), 출생성비 및 합계출산율 인구 동태 통계」
<https://www.e-stat.go.jp/dbview?sid=0003411595>

3) 출처: 통계청, 『2022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언급처럼 ‘큰 틀로 보면 비슷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다른 사회를 비교하는 것으로 때로는 당연시되어 온 각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 가능하여 서로 간과하기 쉬운 핵심적인 요소들을 짚어보는 데 있어서 매우 유효한 분석방법’ 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전술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현상에 주목하고 그 원인을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서구 중심의 이론으로는 한일 간의 출산율 하락 속도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압축적 근대’ 이론에 기반하여 한국 사회가 경험한 젠더 혁명이 그 핵심 원인을 주장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어머니 세대와 딸 세대 간의 생애과정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는 한국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3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이 지속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다. 또한 출산율 하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한일 양국의 저출산 양상과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언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파악하여 문제의 핵심에 접근한다. 제Ⅲ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기존연구와 이론적 설명을 살펴보고 기존 이론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이유를 고찰한다. 제Ⅳ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가족가치 변화를 다루며 한국과 일본 간의 핵심적 차이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일본 내각부가 2018년에 실시한 「일본과 외국 여러 나라의 청년 의식에 관한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젠더와 세대 간 차이를 비교한다.

제Ⅴ장에서는 양국 청년들 사이에서 가족가치가 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어머니와 딸 세대의 생애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변화—여성의 교육 성취,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지위, 가족·여성 정책, 남녀의 갈등과 결혼 시장—이라는 4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양국의 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에 대한 제안을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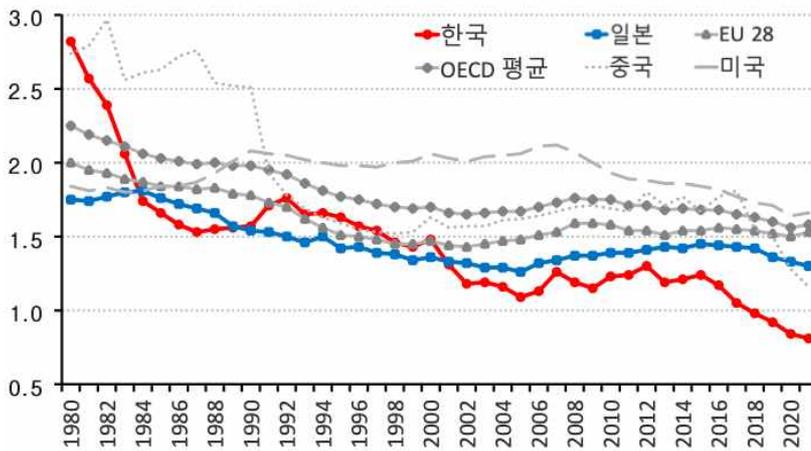
II. 가족 변동 양상 비교

1. 저출산: 2000년 이후 가속

<그림 1> 은 1980년부터 2022년까지 주요 국가와 한국, 일본의 출산율 하락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출산율은 1980년 당시 2.8로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1.5로 떨어졌고 2005년에는 1.09를 기록했다. 이 시기부터 한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부터 2015년까지는 비교적 완만하게 감소하던 출산율이 2015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2015년은 한국 사회의 가족 관련 각종 지표에서 변화의 가속이 일어난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여성의 고용률이 50%를 초과했으며 특히 30대 여성의 고용률은 2015년 56.9%에서 2023년 68.0%로 급증했다. 연간 혼인 건수 또한 2015년 30.3만 건에서 2023년 19.4만 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⁴⁾. 반면, 일본의 출산율은 1980년 시점에서 이미 한국보다 낮았으나 이후의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그림 1> 출산율 하락추세 국제비교: 1980-2022년



자료: OECD(2022) 「Fertility rates: 1980-2022」

*한중일에 대해서는 2022년 각국 통계에서 수치 추가⁵⁾

그렇다면 1년 동안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는 얼마나 감소했을까?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의 연간 출생아 수는 1980년부터 2023년 사이에 52% 감소해 약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한국에서는 무려 73%나 감소해 출생아 수가 반세기 내에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특히 한국의 감소 폭은 2000년 이후 더욱 가팔라졌으며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25.8% 감소한 반면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57.5%나 감소했다.

2015년이 중요한 티핑 포인트로 작용했음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불과 8년 사이에 한국의 출생아 수는 약 44만명에서 23만명으로 무려 47.5%나 감소했으며, 같은 시기의 일본 출생아 수는 약 101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24.6% 감소했다. 이는 한국이 일본보다 2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일본의 경우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을 밑돌기 시작한 후 2023년까지 반세기가 지났으며 일본에서는 총인구 중 40% 이상이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세대가 된다는 장기적인 저출산을 경험해 왔다(이와사와(岩澤) 2015: 86). 이에 비해 한국의 저출산은 지난 20년간 일본보다 2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이후의 감소폭이 두드러진다.

4) 모두 한국통계청 「인구동태조사」에 의한 것이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취업자 수의 비율이며 (고용률 =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인구), 분모에 실업률을 포함하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계산 방식이 다르다 (경제활동참가율 = (취업자 + 실업자) / 15세 이상 인구). 모두 일하는 여성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여성의 고용률이 50%를 초과한 것은 2015년, 경제활동참가율에서는 2012년이다.

5) 2022년도에 관해서는 일본은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 한국은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중국은 「중국인구·발전연구센터(中国人口与发展研究中心)」의 통계를 사용했다.

따라서 한국의 저출산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출생아 수 감소가 가속된 2000년 이후 특히 2015년 이후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한일 양국 모두 혼외출산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출산이 결혼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혼인의 감소는 출산율 감소로 직결된다⁶⁾. 2015년 한국의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 32.6세, 여성 30.0세였던 점을 고려할 때 2015년에 30세인 85년생 이후부터 결혼과 출산 행동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 연간 출생아수 추이와 감소폭: 1980-2023년

	(단위: 천명)							감소폭 (%)			
	1980	1990	2000	2010	2015	2020	2023	1980-2000	2000-2020	2015-2023	1980-2023
한국	883.0	680.0	640.1	470.2	438.4	372.3	281.0	-25.8	-57.5	-47.5	-73.4
일본	1576.9	1231.6	1190.5	1071.3	1005.7	840.8	758.6	-24.5	-29.4	-24.6	-51.9

자료 : 일본은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 한국은 「통계청 인구동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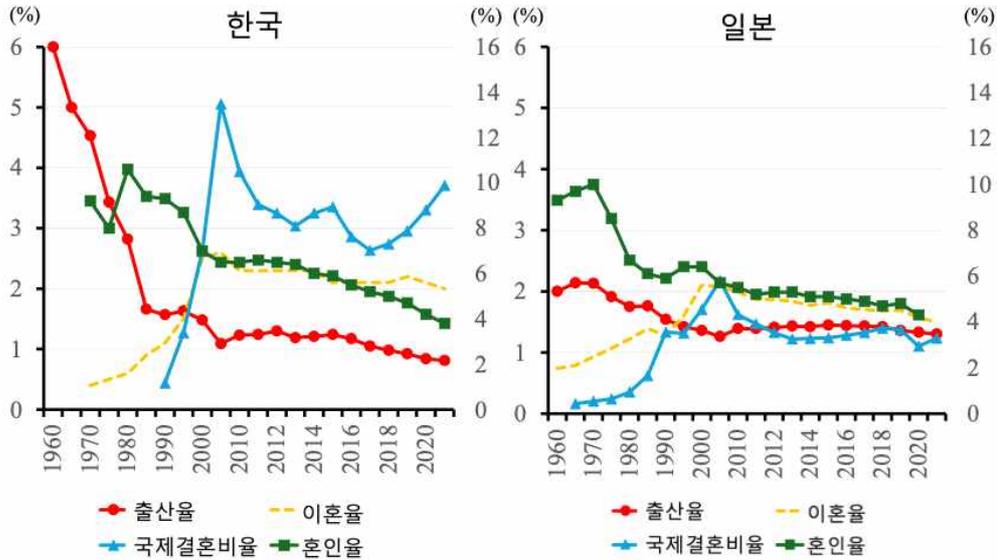
2. 기타 가족 변화 지표 비교

한국과 일본의 가족 변동 차이를 다양한 지표와 함께 살펴보면 개인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중요한 라이프 이벤트인 결혼과 출산, 그리고 최근 늘어난 이혼 및 국제 결혼의 증가 추세를 시계열로 나타낸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를 통해 한국 사회가 지난 반세기 동안 경험한 생애과정의 다이내믹한 변화를 일본과 비교하여 명확히 알 수 있다.

오치아이(2013)는 한국 사회가 ‘압축적 근대’를 경험한 반면, 일본 사회는 ‘반압축 근대’를 경험했다고 이론화했다(오치아이(落合), 2013). 이러한 근대화 속도 차이는 출산율을 비롯한 각종 인구학적 지표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1960년부터 2022년까지 일본에서는 출산율이 약 2에서 1로 감소한 반면, 한국에서는 약 6에서 1 이하로 감소하여 일본보다 3배 빠르게 하락했다. 또한 한국의 이혼율은 1997년 IMF 위기를 계기로 급상승한 이후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혼인율 역시 2015년까지는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로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혼인의 급격한 감소를 대신하여 증가한 것은 국제결혼이다. 한국에서는 2000년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신부를 맞이하는 국제결혼이 급증하여 한때 전체 혼인의 15%를 차지했으며 현재도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일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기타 가족지표는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로 한국만큼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6) OECD에 따르면 2020년 현재 혼외출산율이 5% 이하인 나라는 한국, 일본, 터키밖에 없다. 한국의 혼외출산율은 2.5%, 일본이 2.4%로 양국 모두 대부분의 출산이 혼인제도 내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OECD Family indicators, 2020)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ChartSF2.4.A.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그림 2> 가족변동 지표 한일비교



주: 출생률은 합계출산율, 이혼율은 조이혼율로 나타냈으며 왼쪽 축으로 표시하였다. 국제결혼율은 전체 혼인 중 국제결혼의 비율을, 혼인율은 조혼인율을 나타내며 오른쪽 축으로 표시하였다.

자료: 일본: 출생률은 OECD 데이터, 혼인 및 국제결혼 비율은 후생노동성 인구동태조사에서 필자가 계산. 한국: 출생률은 OECD 데이터, 혼인 및 국제결혼 비율은 통계청 인구동태조사에서 필자가 계산.

기타 생애과정 변화에 관한 지표를 살펴보면 한국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 또한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23년까지의 33년 동안 한국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4.8세에서 31.5세로 약 7세 상승한 반면(한국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 2023), 일본 여성은 같은 기간 25.9세에서 29.7세로 약 3세 상승하였다(후생노동성 인구동향 조사 2023). 1955년 한국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20.5세였음을 고려하면 과거 반세기 동안 초혼 연령이 약 11세나 상승한 셈이다. 보편혼 규범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2000년 이후 여성의 미혼율 급상승은 최선영(2020)에 의해 한국 여성의 ‘생애과정 혁신’으로 표현되었다. 이처럼 ‘압축된 근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애과정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 사회가 경험한 압축적 근대는 단순히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 행동을 둘러싼 다양한 재생산 영역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Ⅲ. 기존연구 및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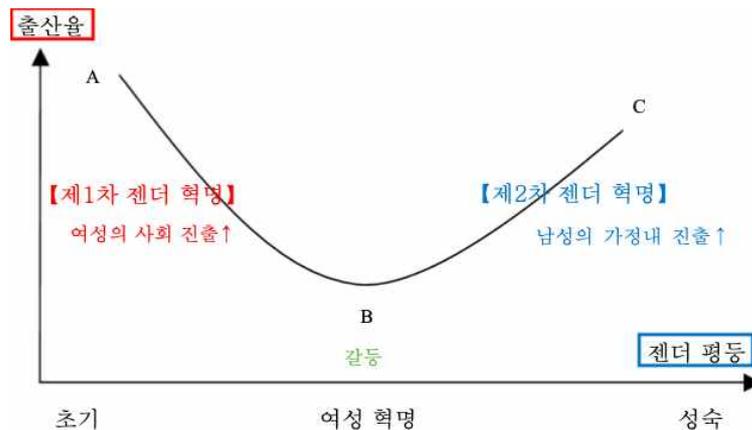
1. 젠더 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중요한 사회 변화 중 하나는 여성의 역할 변화이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의 주된 역할은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대부분의 여성이 경험하는 당연한 삶의 경로였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가정 내 역할에 전념하던 여성들이 점차 평생 고용(lifetime employment)으로의 역할을 이행하면서 여성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변혁적 변화(fundamental transformation)를 겪게 되었다(Goldin, 2006).

초기 서구 사회에서는 1970년대까지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고용이 출산율 하락을 초래한다는 ‘고취업-저출산’ 모델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진전된 국가들에서 출산율이 다시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고취업-고출산’, ‘저취업-저출산’이라는 새로운 틀로 이해되고 있다. 즉 출산율이 낮은 국가들은 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저조한 가족주의 국가들로 특징지어지며, 이 현상은 남유럽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사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Dalla Zuanna and Micheli 2004; Mills et al. 2008; Frejka, Jones and Sardon 2010; McDonald 2009; Ochiai 2011). 남유럽 및 일본과 한국을 대표로 하는 동아시아 사회의 저출산은 이 틀에서 이해되어 왔다.

McDonald(2000a; 2000b; 2006)는 남녀의 역할 변화와 출산율 간의 관계를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이론화했다. 그는 오늘날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 교육과 노동 등 개인 수준에서의 젠더 평등(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s)은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나 가정 내에서의 젠더 평등 수준(family-oriented institutions)은 여전히 낮아 이 격차가 출산율의 하락을 초래한다고 설명한다(McDonald 2000a: 438). 그는 성역할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동시에 변화하지 않으며 교육이나 노동시장에서 개인 단위로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가정 내의 성역할 규범은 변화 속도가 늦어 출산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한다.

Esping-Andersen(2009) 및 Esping-Andersen와 Billari(2015)도 성 평등과 출산율의 관계에 주목하며 젠더 평등 수준뿐만 아니라 그 균형 상태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바라본다. 그들이 제시한 성역할 분업 상태와 출산율의 관계를 다음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성역할 분업 상태와 출산율의 관계

자료: Esping-Andersen and Billari(2015) p.9 ,

<Figure 1> 「Schematic Fertility Trend Overthe “Female Revolution”」에서 인용 및 필자 보충

젠더 평등에 주목한 이론에 따르면 저출산은 전통적 젠더 분업의 평형상태에서 성평등적 젠더 분업의 평형상태로의 전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김영미·계봉오, 2015).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의 일’이라는 젠더 간 역할 분업은 베커(Becker 1981)가 언급한 ‘베커 균형(Becker equilibrium)’이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균형이 맞는 ‘베커 균형’은 ‘젠더 평등 균형

(gender equality equilibrium)’ 상태에 있지만 이 균형(A)에서 공사 영역에서의 젠더 간 평등이라는 또 다른 균형(C)으로 향하는 전환 과정인 (B)에서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이후 성평등 수준이 더 성숙하여 안정화되면 성 역할 분담은 다시 균형을 회복하고 출산율이 다시 회복된다고 보고 있다. 여성이 전업주부로 있는 ‘베커 균형’ 상태(A)에서 가정 외의 경제활동에 진출하는 과정(B)로의 전환 과정을 ‘제1의 젠더 혁명(the first gender revolution)’이라고 불리며, 이후 남성이 가정 내 역할 참여가 진행되는 (C)로 향하는 과정을 ‘제2의 성젠더 혁명(the second gender revolution)’이라고 설명했다. 즉 젠더 혁명의 제1단계는 여성이 생산 활동 영역에 참여함으로써, 제2단계는 남성이 재생산 활동 영역에 참여함으로써 완결된다는 것이다 (Goldscheider, Bernhardt and Lappegard 2015).

그러나 현재까지 완전한 젠더 평등을 달성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서구 사회에서도 여성의 임금 노동 참여는 진전되었으나 남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 참여는 정체되어 있다(England 2010). 이는 ‘미완의 혁명(incomplete revolution)’으로 표현된다(Esping-Andersen 2009).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진전되어도 자녀 돌봄의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기에 사실상 일과 가정의 이중 교대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성이 유급 노동을 마친 후 가정 내에서 담당해야 하는 무급 노동은 ‘세컨드 시프트(second shift)’로 표현되며(Hochschild 1989=2012), 가정 내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불평등한 노동 분배가 ‘혁명의 정체(stalled revolution)’를 초래했다고 여겨진다. 그 이유는 모성과 결부된 강력한 ‘젠더 본질주의(gender essentialism)’가 공고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되지만(Cotter, et al. 2011; Brinton and Lee 2016), 무엇보다도 여성이 가정 외에서 노동을 하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데 비해 남성이 가정 내에서 노동을 해도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급노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려는 동기부여가 낮은 게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일본과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성의 사회 진출은 여전히 M자형 취업 패턴을 따르며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많은 여성이 노동 시장을 이탈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M자형의 저점이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젠더 간의 역할 분업(A)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진전되는(B)로 향하는 이행과정에 있어 출산율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에 따르면 일본보다 출산율이 더 낮은 한국의 상황은 일본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더 진전되었기 때문에 젠더 간 역할이 균형을 잃은 갈등적인 상태에 있다고 이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M자형 저점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깊다. 즉 한국이 일본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더 진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일본보다 더 가파르게 낮아지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왜 한국은 일본보다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더 급격하게 출산율이 하락하는가? 이처럼 서구를 중심으로 전개된 이론적 틀에서는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을 축으로 젠더 역할의 평등/균형 상태와 출산율의 고저에 주목하고 있는데 사회 전체의 동향에 대한 논의에 머물러 있기에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2. 제2차 인구 변천 이론: 개인화 vs 가족주의

Lesthaeghe(2010; 2011)와 Van de Kaa(2001; 2002)는 1960년 이후 선진국에서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저하된 출산율을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적 가치관의 확산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즉 가족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가치관, 자아실현, 세속화, 탈물질주의화와 같은 후기 근대적 가치관의 확산은 만혼화, 출산율 저하, 혼외자 증가, 이혼 증가 등 일련의 가족 변동을 야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부부나 자녀를 중시하는 근대 가족 모델에서 의 이탈로 볼 수 있다.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여성에게 생애과정 변화가 찾아왔다는 점이다. 남성은 일,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젠더에 기반한 근대 가족 중심적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삶의 방식이 확산되면서 여성의 삶의 경로가 다양화되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가족 변동도 ‘개인주의’나 ‘탈물질주의’로의 가치 변동에 의해 야기된 것일까? 필자의 대답은 ‘아니다’이다. 여전히 동아시아에서의 결혼과 출산이 가족 형성의 중심으로 강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동거나 혼외출산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점에서 서구의 경험과는 차이를 보인다. 결혼이 비제도화된 서구의 경험과는 달리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여전히 결혼과 출산이 가족 형성의 전제로서 강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의 개인화는 가족주의적 가치를 유지한 채 형식만 미혼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되며(이미경·김미정·정혜은, 2010; 김혜경, 2013; Chang and Song, 2010; Ochiai, 2011; 2014),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Chang and Song 2010) 또는 ‘가족주의적 개인화’로 표현된다(오치아이(落合), 2013). 은기수는 아시아 사회에는 ‘아시아적 가족 가치’라고 부를 수 있는 가치관이 존재하며, 이는 ‘부계 중심의 가족 의식’, ‘남성 중심적’, ‘상하 수직 관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유교적 가족 가치라고 말하고 있다(은기수, 2009). 또한 ‘보수적’, ‘전통적’ 가족 가치로 간주되는 이러한 일련의 가치 규범은 서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탈근대적 ‘개인주의’와는 대비되는 것이라고 논의한다(은기수·이윤석, 2005).

이처럼 서구 사회가 경험한 ‘젠더 평등’적,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의 확산과는 달리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가족주의적 가치 규범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출산율 저하는 ‘개인주의’가 아닌 ‘가족주의’라는 맥락에서 설명되어 왔다. 여기서 가족주의와 출산율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주의’대 ‘가족주의’를 둘러싼 일련의 논쟁은 ‘개인주의화’가 진행되어도 저출산, ‘가족주의’가 강해도 저출산이라는 이론적 자기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제2차 인구 전환 이론에 기반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이나 동아시아의 ‘가족주의’ 문화라는 맥락에서 저출산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국 사회의 경우 탈물질적인 가치관이 확산되지 않고 오히려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서구 사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 가설이 비서구 사회의 제2차 인구 변천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장덕진(2017)은 「세계 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1986-2015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요지부동으로 물질주의적 가치가 제 자리를 지켜왔다고 보고한다⁷⁾.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한국사회가 후기 근

대적 가치관인 개인주의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에 의해 저출산을 경험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서구 사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2차 인구전환 이론은 동아시아 사회, 특히 한국의 저출산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국은 여전히 물질주의를 추구하면서도 탈가족화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서구 사회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 확산과는 대조되는 현상이다. 동아시아 사회의 저출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급격한 사회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이론적 틀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경험해 온 후기 근대적 생애 과정의 변화와 그에 대한 이론적 틀을 살펴봤다. 다음 장에서는 주요국과 한일 간의 가치관 변화를 비교하여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IV. 압축적 근대와 가족 가치 변화 양산 한일비교

1. 압축적 근대와 압축적 가치관 변동

한국 사회가 경험한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는 ‘압축적 근대’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개념을 제시한 Chang에 따르면, 압축적 근대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극히 압축된 형태로 일어나며 서로 이질적인 역사적, 사회적 요소가 역동적으로 공존하여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재구축하는 문명의 양상”을 의미한다(Chang 2017; Chang 2022: 19). 이러한 압축적 근대는 단순히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룬 것에 그치지 않고 만혼화, 비혼화, 저출산, 이혼율 상승 등 일련의 가족 변화까지도 압축적으로 초래했다.

서구 사회의 경험과 달리 한국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례 없는 높은 경제 성장률과 긴 노동 시간, 높은 학업 성취도는 한국 사회에서 관찰되는 긍정적인 지표이다. 그러나 동시에 높은 자살률, 초저출산율, 그리고 OECD 가입국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과 같은 부정적인 지표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Chang 2022: 180). 이러한 모순된 현상들은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관련된 통계에서 잘 드러나며 이는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압축적 근대화의 복합적인 향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동시대의 모순된 지표들은 가치관이나 인식과 같은 비물질적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이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속도에 맞추어 사람들의 가치관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사회에 속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

7) 그가 분석한 「세계가치관조사」 5차 자료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강한 물질주의적 가치가 55.06%, 약한 물질주의적 가치가 30.54%를 차지해 둘을 합치면 무려 85.60%이나 물질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 물질주의적 가치는 미국이 20.87%, 일본이 24.95%, 스웨덴이 5.07%, 멕시코가 19.51%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장덕진, 2017: 309). 「세계가치관조사」 2-6차 자료를 분석한 양해만·조영호(2018)의 연구에서도 한국의 탈물질주의를 이끌어가는 요인들은 물질주의를 유지하는 요인들을 압도하지 못하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도로 세대 간 가치관 차이를 야기하고 있다. 「국제사회조사(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12년의 가족 모듈 데이터를 분석한 사사노미사에(2021)의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급속한 근대화가 가치관 변화에서도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86년 이후 출생한 여성들 사이에서 급진적인 가치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들은 성역할에 대해 강한 젠더 평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결혼가치는 일본보다도 지향적인 태도를 유지한 채 자녀가치에 대한 부담감이 먼저 급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압축적 근대화를 경험한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경제 구조, 사회 관계, 시대 배경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의식이나 행동이 우발적으로 공존(우발적 다원성)할 수 있다(Chang 2010: 14)는 점을 제시한다. 반면 일본에서는 세대별로 큰 가치관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1986년 이후 출생한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과 자녀에 대한 지향적인 가치가 강화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왜 한국과 일본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가치관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은 제 V 장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사사노미사에(2021)의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급진적인 가치 변화가 확산된 1986년 이후 출생 세대, 특히 1990년대생들의 가치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일뿐만 아니라 서구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비교해 보고자 한다.

2. 젊은 세대의 가치관 비교: 7개국 비교

한국과 일본의 청년 세대가 가지는 가족가치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특히 결혼과 출산 적령기에 있는 1990년대생들이 가지는 가족가치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내각부가 7개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일본과 외국 청년의 의식에 관한 조사(2018년도)」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이 조사 자료는 여러 나라 청년의 가치관을 비교하여 청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일본 내각부가 2013년도부터 5년마다 수집하는 중요한 자료이다⁸⁾. 조사는 일본,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국에서 약 1,000명씩의 샘플 회수를 원칙으로 한다⁹⁾.

조사 대상은 2018년 당시 13세에서 29세인 1989년생부터 2005년생이며 2024년 현재 19세부터 35세에 해당한다. 특히 1990년대생들은 25세부터 34세로 가족형성기에 속해 있어 이들의 가치관은 향후 가족 제도와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집단이다.

우선 전통적인 성역할 분업의식을 묻는 질문인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겠다. <그림 4>에서 나타나듯이 7개국 청년 세대에서는 전반적으로 젠더 역할 분업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많았다. 그러나 남성들이 여성보다 찬성 의견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경향이 확인되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찬성 의견이 높아지는 경향도 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대다수가 이러한 전통적인 성역할 분업에 반대하고

8) 내각부가 조사한 이 자료는 동경대 사회과학연구소 부속 사회조사·데이터 아카이브 연구센터(SSJ)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분석을 하기 위해 SSJ 데이터 아카이브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았다.
<https://ssjda.iss.u-tokyo.ac.jp/Direct/gaiyo.php?lang=jpn&eid=1302>

9) 조사대상국과 응답자 수는 한국이 1,064명, 일본이 1,134명, 미국이 1,063명, 영국이 1,061명, 독일이 1,049명, 프랑스가 1,060명, 스웨덴이 1,051명이다.

있으며, 이는 서구 국가들보다도 더욱 젠더 평등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본의 경우 남성들 사이에서 찬성 의견이 높지만 서구사회와 비교해 특별히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한국 여성들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해 유독 강하게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4〉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 에 대한 찬반 의견



다음으로 <그림 5>에서 ‘자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봐야 한다’ 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가치관을 ‘3세아 신화’ 라고 부른다.¹⁰⁾ 그러나 젊은 세대에서는 자녀가 어릴 때 육아에 전념하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더 이상 지지 받지 않음이 확인된다. 한국에서도 젊은 여성들은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전념해야 한다는 책임을 강하게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다.¹¹⁾

흥미로운 점은 서구사회에서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 는 주장에는 반대하면서도 ‘자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봐야 한다’ 는 주장에는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수주의 복지국가로 알려진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여성들조차도 이러한 가치관을 강하게 내재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남녀 모두가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10)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가 5년마다 조사하는 「출생동향 기본조사」 에 따르면, 2015년도까지만 해도 독신 여성들은 자녀가 어릴 때 한번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재취업하는 ‘재취업 코스’ 를 가장 이상적인 생애과정으로 여겼다. 그러나 2023년에 발표된 최신 통계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향하는 ‘양립코스’ 가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조사는 2021년도에 실시).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졌으며 파트티가 ‘양립 코스’ 를 선택하길 바라는 남성이 약 40%로 가장 많았다(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제16회 출생동향기본조사, 2022년 9월 9일 발표 개요. <https://www.ipss.go.jp/ps-doukou/j/doukou16/JNFS16gaiyo.pdf>). 본 연구에서도 젊은 세대에서는 자녀 양육에 전념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더 이상 지지받지 않는 경향이 확인된다.

11) 일본 내각부가 2006년도에 실시한 ‘저출산 사회에 관한 국제의식조사’ 에서는 20세에서 49세 사이의 남녀 각각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유사한 질문을 했다. 그 결과 이 질문에 대한 찬성 비율은 한국 48.6%, 일본 57.1%, 미국 43.1%, 프랑스 25.8%, 스웨덴 8.7%로 나타났다. 젠더 역할 분업에 대해 각 나라가 빠른 속도로 젠더 평등적인 가치로 변화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한국의 세대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6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찬성했던 이러한 가치관이 2018년 조사에서는 한국의 20대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가치관 변화가 큰 폭이 확인되었다. 이는 사사 노미사에(202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한국사회가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젠더 평등 지향적인 가치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일본 내각부 2006년도 「저출산사회 백서」 일본의 자녀양육 의식의 특징 <https://www.8.cao.go.jp/shoushi/shoushika/whitepaper/measures/w-2006/18webhonpen/html/i1512000.html>) 이 같은 결과는 인구구조 변동에 주목해 한국을 ‘압축적 근대’, 일본을 ‘반압축적 근대’ 라고 명명한 오치아이(Ochiai, 2014)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사회변동과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가치변화가 비슷한 속도로 변화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육아 책임은 여전히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에서도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직접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유주의 국가로 알려진 영미권에서도 절반가량이 이를 찬성하고 있다.

〈그림 5〉 ‘자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봐야 한다’에 대한 찬반 의견



서구 사회에서도 젠더 평등을 향한 젠더 혁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Cotter et al., 2011; Brinton and Lee, 2016; Goldin, 2006; Goldin et al., 2015; England, 2010; Esping-Andersen, 2009; Hochschild and Machung, 2012). 여성의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참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 내 양육 책임이 주어지고 있으며, 이는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고 첫째 아이 출산 후부터는 남녀 간 임금 차이가 확대된다(Goldin, 2021). 자녀 출산 후 여성의 노동소득 감소는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로 불리며 이는 노동시장 내 젠더 평등을 실현하는데 있어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먼저 근대화를 이룬 서구 사회에서도 가정 내 젠더 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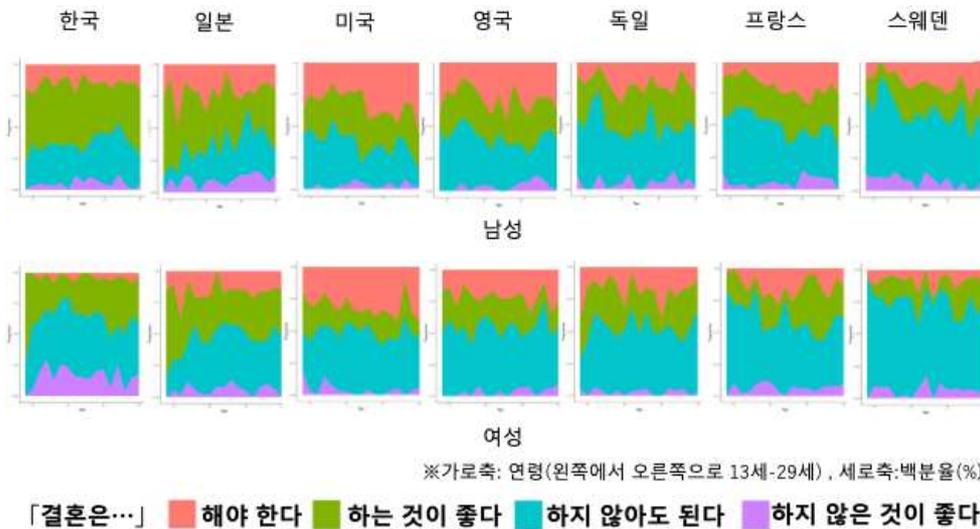
반면 가족주의 복지체제로 알려진 한국과 일본의 젊은 세대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하게 나타난다. 한국과 일본의 여성들은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양육 책임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다. 동아시아 사회에서 높은 교육을 받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이들에게 자녀 양육에 헌신하는 어머니 역할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젊은 세대의 출산율 저하와 무관하지 않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동아시아 사회에서 경험하는 압축적 근대화의 일환으로, 젊은 세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여성들의 이러한 태도는 선진 7개국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이며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오치아이(Ochiai, 2014)의 이론을 뒷받침하며 한국 사회가 경험하는 사회변동과 인구구조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의 급속한 사회 변동과 인구 구조 변화가 서구 사회의 젠더 평등 담론과는 다른 경로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분업에 대한 강한 반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급격히 낮아지는 출산율의 배

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결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겠다.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는 강한 반대 의견을 가진 여성이 20%에 달하며, 반면 ‘결혼해야 한다’ 고 답한 여성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7개국 중에서 한국 여성들이 결혼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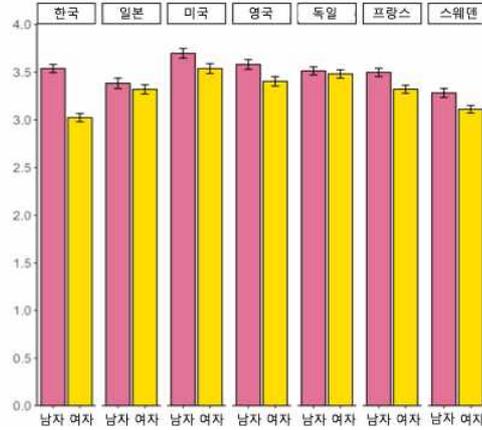
<그림 6> 결혼에 대한 가치관 비교①



반면 한국과 일본 남성들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앞서고 있으며 ‘결혼하는 것이 좋다’ 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비혼율이 여성보다 남성 사이에서 더 높은 점을 고려하면 남성들이 결혼을 원하면서도 실제로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남녀로 나누어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의 가치관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들은 결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면 남성들이 결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남녀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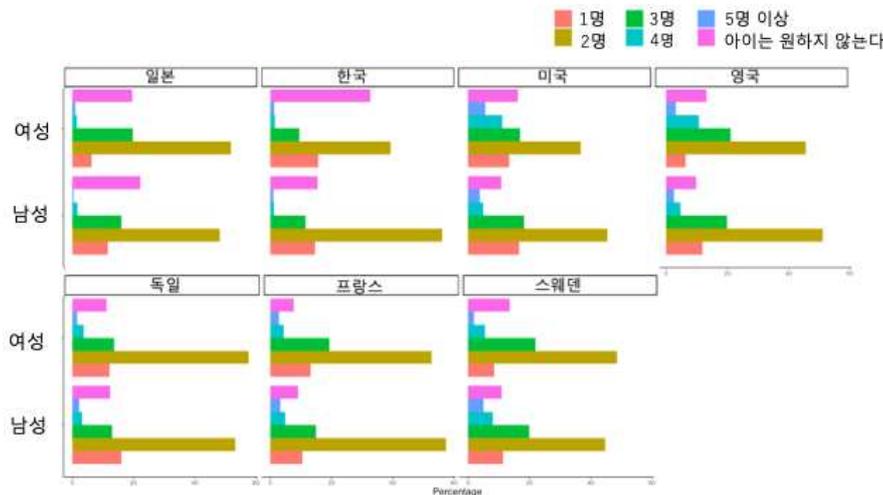
다음 <그림 7>은 <그림 6>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남녀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7개국 청년들은 남녀 간의 결혼 가치관이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한국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 이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성역할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결혼에 대한 가치관 비교②



다음으로 자녀에 대한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8〉에 따르면 일본을 포함한 6개국에서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2명’을 희망하지만 한국에서는 ‘2명’이나 ‘3명’을 희망하는 여성의 비율이 가장 적다. 반면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여성이 무려 40% 가까이 차지하며 이는 매우 놀라운 결과이다. 이 문항은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인데, 한국 남성들은 여전히 2명의 자녀를 희망하지만 여성들 사이에서는 급격한 가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명을 희망하는 여성의 비율과 아이를 원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이 비슷하다. 반면 일본에서는 남녀 모두 2명의 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며 여성들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희망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일본이나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는 크게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았지만 한국 여성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8〉 희망 자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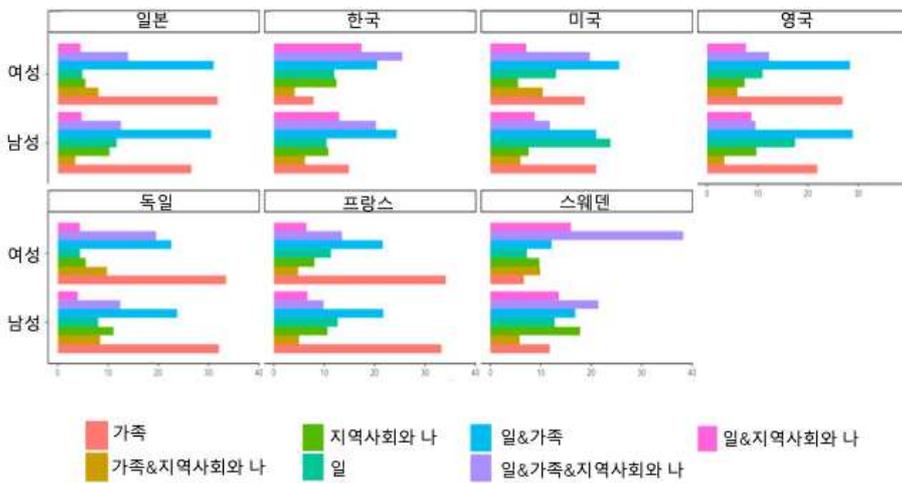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우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자 (〈그림 9〉, 복수 응답 가능). 한국을 제외한 6개국 청년들은 ‘가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족’을 우선으로 선택하지 않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대신 ‘일’ 이나 ‘지역 사회와 나’ 를 선택하는 여성이 많다. 일본의 청년들은 ‘가족’ 또는 ‘일과 가족’ 을 선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극단적인 가치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1990년대생 여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들은 성평등 의식이 매우 강하며 결혼이나 자녀 양육보다 자신의 생활이나 커리어를 중시하는 경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에는 결혼 후 출산을 피하는 DINKS(Double Income No Kids, 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결혼 5년차에 접어든 신혼 가구 중 DINKS가 24.7%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22년 신혼부부 통계」).

<그림 9> 인생에서의 우선 순위: 가족, 일, 지역사회와 나



한편 일본의 저출산 문제는 한국과는 달리 가족 형성이나 기존의 가족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80% 이상의 미혼자가 ‘언젠가 결혼할 생각이다’ 라고 응답하며 기혼 여성은 여전히 평균 2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¹²⁾. 그렇다면 언젠가는 결혼하겠다고 생각하는 일본 독신자들이 왜 결혼하지 않는가? Yoshida(2017)의 생애사 연구에 따르면 결혼을 원하는 여성들이 독신 상태에 ‘표류(漂流)’ 하게 되는 배경에는 다양한 복잡한 생활 환경이 존재하지만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여성의 결혼 의지나 소망이 파트너의 불안정한 생활 환경,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의무, 불운 등으로 인해 좌절되는 경우로 ‘결혼 의지·소망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 이다. 다른 하나는 젊었을 때는 결혼에 소극적이었으나 30대 전반에는 결혼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일이나 다른 활동에 시간과 힘을 쏟다가 결과적으로 결혼 시기를 놓치는 ‘계획 없는 독신 생활로의 표류’ 이다. Raymo, Uchikoshi and Yoda(2021)의 연구는 이러한 경로를 계량분석을 통해 실

12) 부부의 완결 출생아 수는 1970년에서 2002년까지 안정적으로 2.2명을 유지했으나 2005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최근 2021년 통계에서는 1.90명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결혼한 부부는 여전히 평균 2명가량의 자녀를 낳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제16회 출생동향조사(부부 조사)」2021년). 일본의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은 유배우부부의 출산율 감소가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의 증가이다. 같은 해의 조사에서 ‘언젠가는 결혼할 생각이다’라고 대답한 18-34세 미혼자는 남녀 모두 80%를 넘는다(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제16회 출생동향조사(독신 조사)」 2021년). 이처럼 일본의 저출산은 결혼을 원하면서도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혼 적령기를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증적으로 확인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일본 미혼자들이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세 가지 경로는 결혼 거부(rejection of marriage), 결혼 소망 실현 실패(failure to realize marriage desires), 계획 없는 독신 생활로의 이행(unplanned drifting into singlehood)이다. 1982년부터 2015년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의 결과, 일본에서는 결혼을 원하면서도 미혼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약 67%)가 계획 없이 독신 생활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소망 실현 실패는 약 30%를 차지하며 결혼을 거부한 사람은 겨우 5%에 불과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본에서 미혼율의 증가가 결혼을 거부하는 의도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복잡한 생활 환경이나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젊은 세대에서도 여성들이 결혼을 거부해서 미혼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한일 두 나라의 가족 가치를 비교해 보면 가족 형성에 대한 태도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된 가치 변화가 남성과만 다른 것이 아니라 기성 세대의 가치관과도 큰 충돌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치관의 변화 자체는 어느 나라나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세대 간 및 남녀 간의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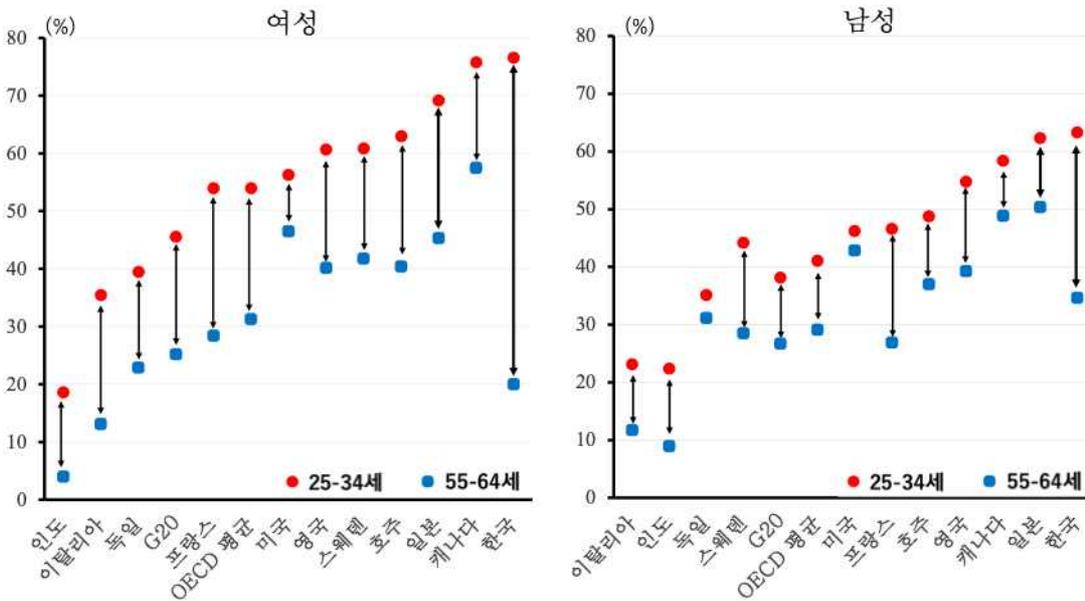
V. 젊은 여성의 압축적 가치변화의 배경요인: 2000년 이후의 사회변화

1. 여성교육 성취: 여성의 압축적 고학력화

필자는 2000년대에 일어난 ‘여성 교육 수준의 폭발적 상승’ 과 그로 인해 촉발된 ‘젊은 여성들의 급격한 가치관 변화’ 를 한국의 압축적 저출산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본다. 장경섭은 한국 사회가 경험한 근대화를 ‘압축적 근대(compressed modernity)’ 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장경섭, 2009; Chang 2017, 2022). 이는 서구 여러 국가들이 2세기 이상에 걸쳐 이룩한 근대화 과정을 단 반세기 사이에 성취한 것을 의미한다. 이 ‘압축적 근대’ 로 인해 실현된 것은 단순한 경제성장뿐만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 등 가족에 관한 다양한 지표와 교육 수준, 평균 수명 향상 등 한국사람들의 생애 과정도 ‘압축적으로’ 변화해 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의 ‘압축적 고학력화’ 이다.

다음 <그림 10> 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교육 수준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왼쪽 그림은 어머니와 딸 세대, 오른쪽 그림은 아버지와 아들 세대의 고등 교육 이수 수준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10> 교육 수준의 세대 간 차이 국제비교



자료: 「OECD Population with tertiary education (2022)」

오늘날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 수준이 남성을 앞지르고 있다. 주목할 점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교육수준 차이이다. 한국에서는 딸 세대와 어머니 세대 간의 고등교육 이수 수준 차이가 OECD 가입국 중에서도 유례없이 크며 그 차이는 무려 60%에 이른다. 딸 세대의 교육 수준이 어머니 세대보다 향상된 것은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이지만 OECD 평균 차이는 약 20%에 불과하다. 세대별로 교육 수준이 약 20%씩 향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에서는 증조모부터 딸 세대까지 3세대에 걸쳐 경험하는 변화를 한국은 단 1세대만에 달성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성의 ‘압축적 고학력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현상이며 이는 한국의 가속적인 저출산의 핵심적인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에 5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1958년부터 1967년 사이에 태어난 부모 세대는 한국전쟁 후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녀 교육에 제한을 받았으며 많은 형제자매 중에서 대부분 아들만큼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함께 가계에 여유가 생기면서 평균 어머니 세대들은 2명의 자식에게 아들, 딸 상관없이 오히려 딸에게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투자를 하였다. 그 결과 1988년부터 1997년 사이에 태어난 딸 세대의 대학 진학률은 무려 76.6%로 어머니 세대의 20.0%에 비해 급격히 상승하였다. 반면 아버지와 아들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각각 63.4%와 34.7%로 어머니와 딸세대 차이만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오히려 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아들보다 높다. 이는 딸 세대가 어머니 세대와는 전혀 다른 생애 경로를 따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통해 가정 일에 헌신할 수밖에 없던 반면, 딸 세대는 고등 교육을 통해 높은 인적자본을 축적하며 직업을 선택하고 커리어를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가정 일에 종사하던 역할에서 생애고용자(lifetime employment)로의 생애과정 변화를 이끌어낸 근본적이며 혁명적인 변화이다(Goldin, 2006).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여성들의 삶의 선택이 넓어졌지만 한국만큼 단기간에 여성의 삶이 혁명적으로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 모두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이 낮기 때문에 딸의 고학력화에는 부모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인적자본 형성을 위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젠더나 본신의 학력,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딸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부모세대의 헌신적인 지원 덕분에 오늘날 한국의 딸 세대는 무려 약 80%가 고학력자가 되었다. 2008년 이후로는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르고 있으며 이는 90년대생 여성들이 남성보다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모의 헌신적인 지원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시키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였다.

한국과 비교하여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 어머니들 사이에는 딸의 교육성취에 대한 기대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했음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1982년에 일본 내각부가 세계 5개국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가 1987년에 한국에서의 조사를 추가한 자료에 따르면¹³⁾, 한국 어머니의 81.2%가 딸의 대학 진학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이는 아들에 대한 기대(88.3%)와 큰 차이가 없었다¹⁴⁾. 반면 일본에서는 아들의 대학 진학을 기대하는 비율이 73.0%인 것에 비해 딸의 대학 진학을 기대하는 비율은 27.7%에 불과했다. 이는 일본 부모들이 아들과 딸을 구별하여 교육을 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조사가 2005년에 베네세 교육종합연구소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조사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들은 딸의 대학 진학(41.1%)보다 대학원 진학(43.8%)을 더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쿄에 거주하는 부모들은 여전히 아들(79.0%)과 딸(53.4%)의 대학 진학 기대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도쿄에 거주하는 부모는 일본 전국에서 딸을 가장 많이 대학으로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의 성별에 따라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¹⁵⁾.

일본에서도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상승했지만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여전히 남성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일본 최고의 학벌인 동경 대학에 진학하는 여성의 비율은 오랫동안 20%를 넘지 못했으며 2021년에 처음으로 20%를 넘어서 2023년에는 22.3%로 상승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지만 세계적으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공별로 보면 공학 계열과 자연과학 계열에서는 여학생 비율이 특히 낮으며 공학부에서는 여학생 비율은 12%, 자연과학을 배우는 이학부에서는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여성 대학 진학률은 남성보다 높으며 서울대에 입학하는 여학생 비율도 40%를 넘고 있다.

13) 한국갤럽조사연구소(KoreaSurvey(Gallup)PollsLimited), 1987. Brintonetal(2001)pp.139, Table5.1 「Mother's University Aspirations for Sons and Daughters」에서 인용. 이 자료는 1982년 일본 내각부가 조사한 일본, 미국, 스웨덴, 서독, 영국에 대해 조사한 자료이다. 조사 대상자는 각국 1,200명씩의 기혼 여성이며 나중에 한국 갤럽 조사연구소가 1987년에 한국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이 자료를 공개하였다.

14) 한국에서는 계층 간의 동질혼 즉 교육 수준에 따른 차별적 결혼 시장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었기 때문에 (Lee 2001; Park 1991) 여성의 교육 수준이 노동 시장 참여와 직접 연결되지 않았던 시대에도 한국에서는 딸에게 높은 교육 수준을 기대했다. 따라서 한국 부모는 비록 사회 활동을 통한 정당한 직업적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들 교육에 못지않게 딸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온 것이다(장경섭 2009: 254).

15) 2023년 도도부현별 여성 4년제 대학 진학률을 확인하면 동경은 76%로 가장 낮은 아키타현(37%)이나 같은 동북 지방 및 규슈지방(대부분 38%)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여전히 여성들이 단기대학(2년제)으로 진학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전국적으로 여성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남성보다 낮고 동경에서는 2%의 차이지만 전국 평균은 5%의 차이가 있다. 남녀 차이가 가장 큰 야마나시현에서는 16.1%나 차이가 나며 사이타마현(13.0%), 홋카이도(10.1%) 또한 남녀 차이가 크다(자료: 문부과학성「2023년도 학교기본조사 통계」).

교육성취는 성역할 분업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김(金), 2002). 그 사회에 내재된 문화, 숨겨진 교육 과정, 부모의 양육 태도 등 여러 요소가 여성의 교육 성취에 반영된다. 한일 간에 존재하는 여성 교육 성취에 대한 문화차이가 오늘날 딸 세대의 교육성취에 반영되고 있다.¹⁶⁾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어머니들 사이에는 딸에 대한 교육 기대에서 오래 기간 차이가 존재했으며 이러한 차이가 딸 세대의 교육 성취에 반영되어 오늘날 양국 딸 세대의 생애과정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 세대의 열정적인 지원으로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한국의 딸 세대가 경험한 압축적 고학력화는 ‘젠더 혁명’이라 불릴 만한 생애과정의 혁신을 가져왔다. 이러한 딸 세대의 교육성취가 여성 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음 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직면한 사회적 구조와 그로 인한 삶의 방향을 비교함으로써 두 나라의 여성 정책과 노동 시장에서의 위치 차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2.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지위

현재 연령별 여성 고용률을 보면 M자형 곡선을 그리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이는 두 나라의 여성들이 결혼 전에는 직업을 가지지만 결혼이나 출산을 계기로 일을 그만두었다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 다시 노동 시장에 복귀하는 생애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생애과정은 성역할 분업에 기반한 가족주의적 복지체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의 저출산 문제의 주요 배경으로 지적된다(Ochiai, 2009). 동아시아는 남성을 경제적 책임의 주체로, 여성을 가족 돌봄의 주체로 보는 성역할 분업이 유지되고 있으며 고령자와 자녀의 동거율이 높고 가족 관계 내에서 복지가 형성되는 규범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진다(Esping-Andersen 1999=2001; 이와이(石井) 2013에서 재인용). 이와이는 여기에 교육비가 가계에 크게 의존하는 점도 추가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가정 내에서 남성의 가사 분담 비율이 매우 낮고 육아 책임도 어머니 역할로 여겨지는 강한 사회 규범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에게 부과되는 돌봄 부담이 동아시아의 저출산 배경으로도 지적되어 왔다.

한일 양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낮고 M자형 곡선의 하단이 일본보다 더 깊다. 오늘날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나라에서 출산율 회복이 관찰되기 때문에(Brewster and Rindfuss 2000; Engelhardt, Kögel and Prskawetz 2004)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사회에서는 출산율이 낮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의 고용 상태를 ‘양’이 아닌 ‘질’로 분석해야 그 사회에서의 여성 지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남성보다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아무리 일하는 여성이 증가해도 지도적 위치에 있는 여성 비율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직종으로의 진출 그리고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 비율 등 여성 취업의 성격을 나타내는 질적인 지표를 확인해야 그 사회에서의 여성 지위를 보다 정

16) OECD 자료에서도 일본 여성의 자연과학·수학·통계학 및 공학·제조·건축 분야의 진출이 각각 27%와 16%로 OECD국가 평균의 52%, 26%에 크게 미치지 못해 가맹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일본 내각부 2022년「Society 5.0 실현을 위한 교육 인재육성에 관한 정책 패키지 개요」5페이지에서 인용). 그러나 일본 여성학생의 수학 성적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 여성들의 진학에는 최고의 학벌을 피하거나 STEM 분야의 진학을 피하는 문화적인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15세 수학의 성적 남녀 차이 OECD 데이터 참조(OECD 2022, 「mathematics performance(PISA)」).

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 남녀가 어떻게 노동시장에 배치되는지, 여성이 얼마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는지를 살펴보자.

정이환(2011)은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최근까지 한국과 일본의 정규직 고용관행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 위기 이후 일본에서는 장기 고용 관행이 유지된 반면 한국에서는 비자발적인 고용 조정이 증가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악화되었다고 본다. 즉 한국에서는 경제 위기 이후 남성의 고용도 불안정해졌는데(정이환, 2013; Kwon, 2015) 일본에서는 경제위기 이후에도 일본형 고용체제를 유지해 남성의 고용을 보호해 왔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오오타케(大竹) 2001; Song 2014; Vogel 2006). 경제 위기 이후 일본은 경로 의존적으로 종신고용 관행을 유지하면서 남성의 고용을 여성의 비정규직화로 보호해 온 반면, 한국에서는 남녀 모두가 불안정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경제 위기 이전에도 일본처럼 장기 고용 관행 자체가 널리 제도화되지 않았기에 남성 또한 불안정한 노동자가 많았다(최선영·장경섭, 2004).

물론 오늘날도 한국의 노동시장은 젠더 직업분리가 남아 있어 상대적으로 여성이 낮은 지위에 놓여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남성고용이 불안정화되면서 2000년 이후 이미 고학력자가 된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현재 여성 노동시장 참여 성격은 허은(2013)의 표현을 빌리면 ‘고학력·저연령 여성의 상승 진입’과 동시에 ‘저학력·고연령 기혼여성의 하층 진입’이 동시에 늘어난 것이다. 이상직(2020)은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난 20년간 한국인의 노동 이력을 코호트와 젠더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한 결과 1976년부터 1984년 사이에 출생한 코호트는 ‘남녀 차이가 축소된 세대’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 세대부터는 여성의 노동 시장 이탈이 감소하고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진입할 때의 젠더 차이도 크게 축소되었으며 중소기업으로의 진입에서는 남녀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에서는 빠른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기에 세대와 젠더에 주목할 중요성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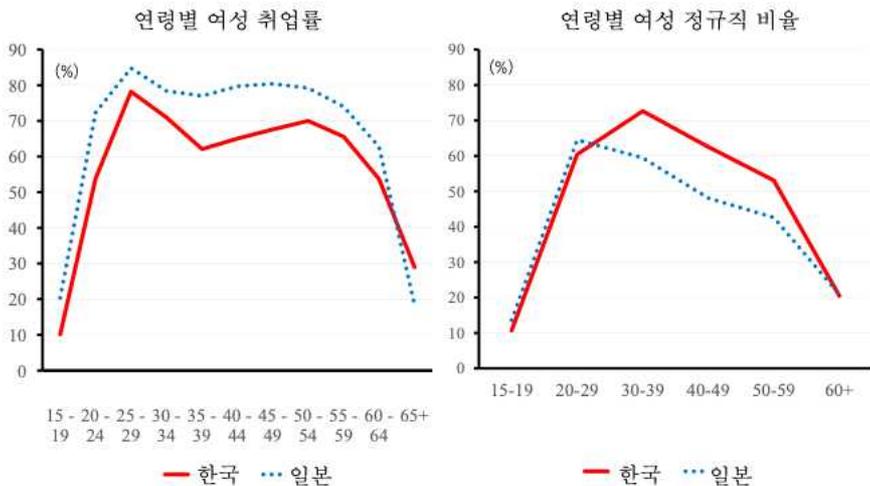
일본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해졌는가? 물론 일본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과거에 비해 상승했지만 오늘날도 일하는 여성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일본의 고용 및 가족 제도는 여전히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에 의거하고 있으며 핵심 노동자로부터 여성을 배제하고 전업주부를 여전히 세제로 우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생계부양자인 남편과 전업주부인 아내’라는 젠더 역할을 분리한 가족모델이 1980년대에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배우자인 아내의 법적 상속 비율 조정(인상), 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을 두는 전업주부의 소득세 공제(배우자특별공제: 1985년), 부양배우자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세금 경감 조치(소득세의 배우자 공제: 1986년), 연금보험료 지불 면제(제3호 피보험자제도: 1986년) 등이 있다. 1980년대부터 만들어진 이러한 일련의 제도로 인해 오늘날도 대부분 기혼 여성이 배우자 특별 공제를 받기 위해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 노동시간을 조절하고 일한다¹⁷⁾.

17) 전업주부가 파트타임 노동에서 기준으로 두는 금액이 103만엔(2018년 150만엔으로 인상)이기에 ‘103만엔의 벽’으로 불려져 왔다. 연간 소득이 이 범위를 넘으면 배우자 부양우대 제도에서 벗어나기에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연금을 지불할 의무가 생긴다. 2019년 총무성 ‘노동력조사’를 살펴보면 일본 맞벌이 가구의 절반 이상이 150만엔 이 내로 일하고 있다(久我, 2019).

일본에서는 전업주부 및 연간 150만엔 이하 파트타임 노동으로 일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살아온 어머니 세대가 딸에 대해서도 또한 본인과 비슷하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해 주는 남자와 만나는 것을 기대하며 키웠으며, 여성이 교육을 통해 자립하고 사는 것보다 남성의 부양하에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 딸 세대 또한 그 제도하에서 부모의 기대에 응하도록 살아왔다. 그것이 위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여성이 남성보다는 높은 학력 및 학벌을 피하며 직업으로 직결되는 STEM 분야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난다. 오늘날까지 견고하게 일본에서 젠더 역할을 구분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실현되지 못하도 불만없이 그 체제가 유지되어 온 배경에는 경제성장을 이루어 안정적으로 근대가족을 실현한 부모세대의 존재가 있으며, 여성이 남성 부양 하에서 보호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제도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70년대 이후 세계가 젠더 평등을 위한 법적 정비를 추진해 온 가운데 일본은 ‘전통적인 가족을 지키자’ 고 하는 정책을 전개해 왔으며 현재도 가족 제도는 남성이 생계부양 책임을 지고 여성이 가족 책임을 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여성의 교육 성취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며 한일 여성의 삶의 방향을 다르게 만들었다.

그럼 실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 위치를 노동시장 참여율과 정규직 비율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자.

<그림 11> 연령별 여성 취업률과 연령별 여성 정규직 비율 한일비교(2022)



주1: 일본의 정규 고용률은 연령별 고용자(임원을 제외) 중 정규직 직원의 비율을 의미하며, 한국의 정규 고용률은 연령별 임금 노동자 중 정규직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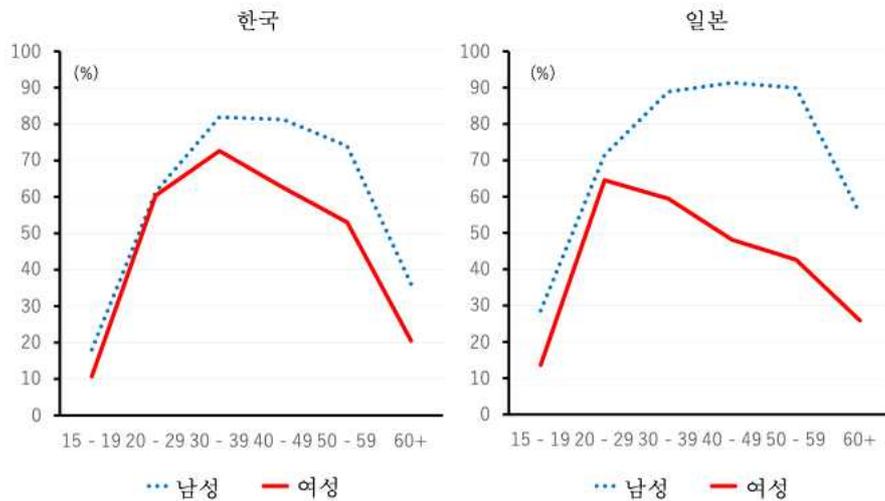
출처: 왼쪽 : 한국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일본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조사」

오른쪽: 한국 통계청 「성·연령별 고용형태별 취업자」, 일본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조사」에서 필자 계산.

먼저 한국과 일본의 여성 고용률을 비교한 <그림 11> 의 왼쪽을 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고용률이 한국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하는 여성 중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을 비교한 오른쪽을 보면 상황이 역전된다.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는 30대 가임기 여성의 고용률이 오히려 더 높아진다. 여성 정규직 비율

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해 보면, 일본에서도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가족 형성기에 있는 30대 여성의 정규 고용률이 54.5%에서 59.5%로 약 5% 상승하였으나 20대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일본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 조사」 각 연도). 한편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 다시는 정규직으로 복귀할 수 없는 일본 여성의 취업 성격은 비정규직으로는 ‘M자형’을 그리지만(그림 좌) 정규직으로는 ‘L자형’을 그린다(그림 우). 반면 한국에서는 2003년 20대가 정점이었던 정규 고용률이 2010년 이후 30대로 이동하였으며, 2003년부터 2022년까지 30대 정규직 비율이 61.7%에서 71.1%로 10%나 상승하여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의 노동 시장 이탈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 통계청 「근로형태별 취업자」 각 연도).

<그림 12> 연령별 남녀 정규직 비율 한일비교(2022)



주2: 주1과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
출처: 한국 통계청 「성·연령별 고용형태별 취업자」, 일본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조사」에서 필자 계산

다음으로 <그림 12>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남녀의 연령별 분포를 확인해 보자. <그림 11>에서 한국 여성이 일본 여성보다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이 많은 것을 확인했으나 여기서는 남녀가 얼마나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 비해 일본이 훨씬 남녀 구별적인 노동시장이 제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 위기 이후 일본과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한 Song(2014)의 연구에서도 한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재구조화한 반면, 일본은 내부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외부 노동자를 재구조화했다고 지적되어 있다. 즉 일본이 남성 가장을 지키고 여성을 비정규직 노동자화 시킴으로써 위기에 대응했다면 한국에서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고용 안정성을 보호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가계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지만(우치코시(打越), 2018), 한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가계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지닌다(Shin and Kong, 2015). 즉 여성의 노동소득이 가계에 기여할 수준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결과는 한국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젠더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고 여성의 경제적 기여도가 일본보다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 위기 이후의 노동시장 변화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졌다. 이로 인해 남녀 모두 한정된 안정적인 일자리를 둘러

싼 경쟁이 격화되어 갔다. 특히 한국 여성들은 생애 고용을 목표로 한 전문직 분야로의 진출이 활발해졌으며 의사, 변호사, 연구자, STEM 분야의 진출 등 여러 분야의 진출 비율이 모두 일본을 압도한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글로벌 젠더 갭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를 보면, 한국이 2024년 146개국 중 94위(0.696점)로 매년 순위가 상승한 반면 일본은 118위(0.663점)로 매년 순위가 하락하고 있다¹⁸⁾. 이 조사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것은 2020년부터이며 이후 순위가 더욱 상승되고 있다. 한국의 연령대가 높은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 세대를 포함한 여성 전체의 평균값으로 국제비교한 이 조사 결과는 젊은 세대에서 얼마나 젠더 평등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분야는 정치적 역량 분야이다.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의 젠더 평등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는 여성 정책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2000년 이후 한국에서 급속도로 진전된 여성 정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3. 가족 · 여성 정책

한국에서의 여성 정책의 전개는 단순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다. 성 평등은 여성의 인권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이는 민주화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여성 운동의 결실로 법적 개정으로 이어졌다. 한국에서의 가족 정책은 가족법 개정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다. 1957년에 민법 개정을 시작으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가족법 개정 운동이 지속되었다(양현아 2011). 그 중심은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도입된 호주제 폐지 운동이 있었으며 한국 최초의 민법안이 마련된 1950년대부터 이미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 호주제 폐지 운동에는 50여 년간의 한국 가족법 개정 운동의 역사가 집약되어 있다(양현아 2011: 313).

이러한 오랜 투쟁 끝에 호주제는 2005년에 마침내 폐지되었다. 호주제 폐지 이후 2008년에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어 호주 중심의 가족개념이 성인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공적 문서 체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민주화 이후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결과였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여성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부 기관인 여성부가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여성부 설립 이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여성 지위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의회와 국회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여 여성 의원 수를 크게 증가시켰고 여성부에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을 관료로 영입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한 제도 개혁은

18) 세계 젠더 격차 지수(The Global Gender Gap Index)에서는 경제적 참여와 기회(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교육 성취(Educational Attainment), 건강과 수명(Health and Survival), 정치적 임파워먼트(Political Empowerment)의 4가지 측면의 젠더 격차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있다. 1에 가까울수록 젠더 평등을 나타내며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2024년의 평가를 보면 경제적 참여와 기회에서 일본이 0.568, 한국은 0.605, 교육 성취에서는 일본이 0.993, 한국이 0.980, 건강과 수명에서는 일본이 0.973, 한국이 0.976, 정치적 임파워먼트에서는 일본이 0.118, 한국이 0.223로 평가되어 있다. 이 지표에서도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기여, 정치적 임파워먼트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우월했다. 한국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된지 오래 되었지만 평균값으로 구하는 국가간 비교에서는 윗세대의 지표가 최근의 동향을 상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국 여성의 교육성취는 일본여성보다 낮은 걸로 평가된다. 전체 동향에서도 일본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한국의 어머니 세대의 매우 낮은 교육수준과 그로 인한 낮은 여러 측면의 지표를 포함해도 우월할 수 있을 정도로 젊은 세대에서 급격히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고 있음을 알려 준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여성 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와 가족 구조의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 참여를 증가시키고 육아 및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도입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강화한 할당제 도입으로 인해 여성 의원 비율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살펴보자.

2003년 이전까지의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중 여성 의원의 비율은 일본보다 낮았다. 그러나 여성 의원의 비율은 2000년 당시 5.9%에 불과했으나 할당제가 도입된 2004년에는 13.0%로 약 2배 증가했다. 이러한 할당제 도입 덕분에 한국의 여성 의원 비율은 1996년 3.0%에서 2020년에는 19.0%까지 크게 상승했다¹⁹⁾. 여성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Sawer 2002: 8-9) 여성의 정치 참여 특히 여성 국회의원 증가는 여성 정책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Bonoli and Rober 2010: 102). 한 번 형성된 제도는 경로 의존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이후 보수 정권에서도 여성 정책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

이처럼 한일 양국의 구조적 차이와 사회적 변화는 두 나라의 여성들이 어떻게 다른 생애 경로와 사회적 위치를 형성하게 만들었는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노동 시장 진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젠더 평등을 향한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변화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4. 남녀의 갈등과 결혼 시장의 불균형

최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급격히 향상되면서 같은 세대 남성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반발이 커져 갔다. 이는 여성에 대한 분노와 혐오감으로 표출되며 남녀 간 갈등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갈등은 세대 간 격차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 내에서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남성들은 젠더 평등을 추진하는 정책에 의해 자신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이는 노동 시장에서는 젠더에 따른 선발 기준이 학력 배경을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젠더와 계층이 교차하는 경쟁이 벌어진 결과였다. 조귀동(2020)은 1990년대생이 겪고 있는 불평등을 분석하며 남녀 간 교육 격차가 거의 사라진 현재, 중상위층 20대 남성들이 명문대 진학과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에서 여성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들은 여성들이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비정규직 또는 저소득층 남성들에게는 연애와 결혼 시장에서 자신들이 ‘약자’로 취급되어진다는 현실이 여성들에 대한 분노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여성들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구조 즉 남성 못지 않은 능력을 갖췄음에도 여전히 남성 우위인 사회구조에 분노하며 이러한 남녀 간의 분노와 불만이 서로를 향해 증폭되어 갔다.

이러한 남녀 간의 긴장은 2016년 ‘강남역 무차별 살인 사건’ 이후 더욱 고조되었다. 이 사건은 남녀 갈등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으며 일상 속에 여성 억압을 묘사한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여성 운동을 크게 고무시켰다. 또한 2018

19) 자료: 지표누리 「여성 국회의원 비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통계」)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251>

년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고발은 #MeToo 운동의 기폭제가 되어 젠더 평등을 여성 인권 문제로 부각시키며 강력한 사회적 운동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운동의 주체는 주로 90년대생 여성들이었으며 이들은 한국 사회의 젠더 불평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변화를 요구했다.

이러한 남녀 갈등은 제Ⅳ장 2에서 언급된 남녀 간 가치관 차이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결혼과 출산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주체는 주로 여성들이었다. 90년대생 여성들은 능력 중심의 진정한 젠더 평등 사회를 희구하며 결혼과 출산보다 자신의 커리어 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게다가 이들 세대의 여성들은 남성보다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추게 되면서 동등한 수준의 상대를 결혼 시장에서 찾기 어려워졌다.

또한 인구 구조적으로도 90년대생들의 결혼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90년대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게 남아 있어 많은 가정에서 성비를 조절하는 사례가 있었다. 자연스러운 남녀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5명 정도이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현재 25-29세 인구의 성비는 114.1로 남성 193만 명, 여성이 169만 명으로 여성 인구가 24만 명이나 적다. 이 세대의 성비는 5세별 인구에서 가장 큰 왜곡을 보이며 특히 1990년 출생자의 성비는 116.5로 가장 큰 왜곡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셋째 자녀의 성비는 192.2라는 비정상적인 숫자임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왜곡된 성비는 1984년(성비 108.3)부터 2004년(성비 108.2)까지 지속되었다.

따라서 현재 결혼 적령기에 있는 19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자들은 구조적으로 남성 수의 과잉으로 여성 파트너의 부족을 겪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여성들이 남성보다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추게 되면서 남녀 모두 결혼 시장에서 동등한 파트너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출산을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구조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Ⅵ. 결론 및 논의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을 저하라는 인구적 현상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급격한 구조적 변화와 그로 인한 세대 간, 남녀 간 갈등의 결과물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은 ‘여성의 고학력화’, ‘남성 고용의 불안정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의 진전’이라는 일련의 사회적 변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했다. 이 과정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성 역할 분업에 강력한 도전이 되었으며 그 결과로 남녀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었다. 특히 ‘압축적 고학력화’를 이룬 90년대생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은 서양 국가들과는 다른 경로를 걸어왔다. 서구 국가들이 수 세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젠더 평등을 이룩해 나갔다면 한국은 단 한 세대 만에 이 과정을 압축적으로 실현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생애과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는 기존의 전통적 가치관과 충돌하여 결혼과 출산의 회피로 이어졌다. 갈등의 원인은 변화의 속도에 있으며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압축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세대 간 및 남녀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다.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 진출이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기업 및 가족 문화, 그리고 어머니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는 변화가 따르지 않았다. 고학력 90년대 생 여성들은 어머니 세대의 지원을 받아 매우 높은 인적 자본을 쌓았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며느리'나 '어머니' 역할을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이 세대의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고 자신의 커리어와 자아실현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기존의 정책은 기혼 부부의 양육 및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출산을 저하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앞으로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전통적인 역할을 강요하기보다는 변화된 여성들의 삶의 지향을 받아들이고 공적·사적 영역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사회 전체의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성세대와 젊은 남성의 인식 변화를 촉진하고 평등한 가족 및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남성들도 가사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젠더 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성평등이 실현될 때 출산율 회복도 가능할 것이다.

반면 일본의 저출산 문제는 한국과는 다른 배경에 기인한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유지되고 있지만 남성 중심의 전통적 가족 모델 및 노동시장 구조가 유지되면서 결혼 시장에서의 불균형과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의 저출산은 성평등으로의 이행 과정이 아닌, '전통적 가족 모델의 고집'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압축적 근대화의 부작용으로 세대 및 남녀 간 갈등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고 성평등이 진전된다면 출산율 또한 서서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빠른 변화 수용 능력과 의사 결정 속도를 감안할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변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남녀 평등한 가정과 직장 문화를 구축하고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동아시아 사회는 공통의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교 연구와 협력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압축적 근대화 경험은 서구 사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이들 국가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필요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에서의 여성의 압축적 고학력화가 젊은 세대 여성들의 가치관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은 서구사회의 경험과 다르기에 동아시아적 분석틀을 제시할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변화된 사회 구조와 가치관에 적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대 및 남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한국어 문헌】

- 김영미·계봉오(2015) “이행의 계곡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여성의 고용과 출산에 관한 성평등적 접근.” <한국여성학> 31(3):1-30.
- 김혜경(2013) “부계 가족주의의 실패?: IMF 경제위기 세대의 가족주의와 개인화.” <한국사회학> 47(2):101-141.
- 사사노미사에(2021) “한국과 일본의 가족가치: 젠더와 코호트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논문.
- 양현아(2011) 『한국 가족법 읽기: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창비.
- 양해만·조영호(2018)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탈물질주의: 왜 한국인은 여전히 물질주의적인가?” <한국정치학회보> 제52권 제1호, pp. 75-100.
- 은기수(2009) “아시아적 가족가치의 동아시아 사회 비교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 827-848.
- 은기수·이윤석(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인구학> 제28권 제1호, pp. 107-132.
- 이미경·김미정·정혜은 (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2005년,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3권 제3호, pp. 31-51.
- 이상직(2020) “전환기 성인 이행 경로의 변화: 1870-1984년 코트의 교육·노동·가족 이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장경섭(2009) 『가족 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 장경섭(2018) 『내일의 종언? 한국의 사회경제적 위기』 집문당.
- 장덕진(2017) “데이터로 본 한국인의 가치관 변동” 김우창 외. 『김우창·송복·송호근·장덕진 한국사회 어디로?』 아시아, pp. 298-348.
- 정이환(2011) 『경제위기와 고용체제: 한국과 일본의 비교』 한울.
- 정이환.2013. 『한국고용체제론』. 서울: 후마니타스.
- 조귀동 (2020) 『세습중산층 사회: 90년대생이 경험하는 불평등은 어떻게 다른가』 생각의힘.
- 최선영(2020) “한국 여성의 생애과정 재편과 혼인행동의 변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논문.
- 최선영·장경섭(2004) “성 분업의 근대적 재구성: 한국 여성의 ‘가족형성기 탈취업’ 경향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연구> 제8호, pp. 173-203.
- 허은(2013) “노동시장 계층별 성별직업분리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47권 제2호, pp. 241-266.

【영어 문헌】

- Becker, Gary S. (1981) “Altruism in the Family and Selfishness in the Market Place,” *Economica*, No. 48, Vol. 189, pp. 1-15.

- Brewster, Karin L. and Ronald R. Rindfuss. (2000)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6, No.1, pp. 271-296.
- Brinton, Mary C. (2001) *Women's working lives in East As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Brinton, Mary C. and Lee Dong-Ju. (2016) "Gender-role ideology,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post-industrial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05-433.
- Bonoli, Giuliano. and Frank Reber. (2010) "The political economy of childcare in OECD countries: Explaining cross-national variation in spending and coverage rat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49, No. 1, pp. 97-118.
- Chang, Kyung-Sup. (2017) "Compressed Modernity," Bryan S. Turner, Chang Kyung-Sup, Cynthia F. Epstein, Peter Kivisto, William Outhwaite, J. Michael Ryan (eds), *The Wiley 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al Theory*, Hoboken: Wiley-Blackwell.
- Chang, Kyung-Sup. (2022) *The logic of compressed modernity*. John Wiley & Sons.
- Chang, Kyung-Sup, and Song Min Young. (2010) "The stranded individualizer under compressed modernity: South Korean women in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61, No.3, pp. 539-564.
- Cotter, David, Joan M. Hermsen. and Reeve Vanneman. (2011) "The end of the gender revolution? Gender role attitudes from 1977 to 2008,"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17, No. 1, pp. 259-89.
- Dalla Zuanna, Gianpiero and Giuseppe A. Micheli. (2004) "Introduction," in Gianpiero Dalla Zuanna and Giuseppe A. Micheli (eds.), *Strong Family and Low Fertility: A Paradox? New Perspectives in Interpreting Contemporary Family and Reproductive Behaviour*,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pp. 7-21.
- Engelhardt, Henriette, Tomas Kögel, and Alexia Prskawetz. (2004)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reconsidered: A macro-level time-series analysis for developed countries, 1960-2000," *Population studies* Vol. 58, No. 1, pp. 109-120.
- England, Paula. (2010) "The gender revolution: Uneven and stalled," *Gender & society* Vol. 24, No. 2, pp. 149-166.
- Esping-Andersen, G. (1999=2001) "A welfare state for the 21st century," *The global third way debate*, pp. 134-156.
- Esping-Andersen, G. (2009)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welfare states to women's new roles*. Polity.
- Esping-Andersen, G. and Francesco C. Billari. (2015)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41, No. 1, pp. 1-31.
- Frejka, Tomas, Gavin W. Jones, and Jean-Paul Sardon. (2010) "East Asian childbearing patterns and policy development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36, No. 3, pp. 579-606.
- Goldin, Claudia. (2006) "The quiet revolution that transformed women's employment, education, and famil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6, No. 2, pp. 1-21.
- Goldscheider, Frances, Eva Bernhardt, and Trude Lappegård. (2015) "The gender revolu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hanging family and demographic behavi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4, No. 2, pp. 207-239.

- Goldin, Claudia.(2021) *Career & Family: Women's Century-Long Journey toward Equ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ochschild, Arlie, and Anne Machung. 2012(=1989). *The second shift: Working families and the revolution at home*. Penguin.
- Kwon, Hyunji(2015) "Changing Industrial Relations and Labor Market Inequality in Post-Crisis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44.
- Lee, Sunhwa.(2001) "Women's Education, Work, and Marriage in South South Korea," Mary Brinton ed., *Women's Working Lives in East As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04-232.
- Lesthaeghe, Ron.(2010)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36, No. 2, pp. 211-251.
- Lesthaeghe, Ron.(2011)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A conceptual map for the understanding of late modern demographic developments in fertility and family formation," *Historical Social Research/Historische Sozialforschung*, pp. 179-218.
- McDonald, Peter.(2000a)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6, No. 3, pp. 427-439.
- McDonald, Peter.(2000b) "Gender equity, social institutions and the future of fertility," *Journal of the Australian Population Association* Vol. 17, No.1, pp. 1-16.
- McDonald, Peter.(2006) "Low fertility and the state: The efficacy of polic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32, No. 3, pp. 485-510.
- McDonald, Peter.(2009) "Explanations of Low Fertility in East Asia: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Ultra-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Trends, Causes and Policy Issues*, eds. Gavin Joes, Paul Tay Straughan, and Angelique Chan. Routledge, pp. 23-29.
- Ochiai, Emiko.(2011) "Unsustainable societies: The failure of familism in East Asia's compressed modernity," *Historical Social Research* Vol. 36, pp. 219-245.
- Ochiai, Emiko.(2014) "Leaving the West, rejoining the East? Gender and family in Japan's semi-compressed modernity." *International Sociology* 29(3), pp. 209-228.
- Park, Mee-Hae.(1991) "Patterns and trends of educational mating in South Korea," *South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pp. 1-15.
- Raymo, James M., Fumiya Uchikoshi, and Shohei Yoda. (2021) "Marriage intentions, desires, and pathways to later and less marriage in Japan." *Demographic Research*(44), pp.67.
- Yoshida, Akiko.(2017). *Unmarried women in Japan: The drift into singlehood: The drift into singlehood*. Routledge.
- Shin, Kwang-Yeong. and Kong Ju. (2015) "Women's Work and Family Income Inequality in South South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Vol. 44, No. 1, pp. 55-76.
- Song Jiyeoun.(2014) *Inequality in the Workplace: Labor Market Reform in Japan and South Korea*. Cornell University Press.
- Van de Kaa Dirk.J. (2001) "Postmodern Fertility Preferences: From Changing Value Orientation to New Behavi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7, p. 290-331.
- Van de Kaa, Dirk. J. (2002) "The idea of a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industrialized countries.” Paper presented at the Sixth Welfare Policy Seminar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Tokyo, Japan, 29 January 2002, pp.1-34.

Vogel, Steven Kent. (2006) *Japan remodeled: How government and industry are reforming Japanese capitalism*, Cornell University Press.

【일본어 문헌】

有田伸 (2016) 『就業機会と報酬格差の社会学—非正規雇用・社会階層の日韓比較—』東京大学出版会.

岩井八郎(2013) 「戦後日本型ライフコースの変容と家族主義—数量的生活史のデータの分析から—」落合恵美子編『親密圏と公共圏の再編成：アジア近代からの問い』京都大学学術出版会.

岩澤美帆 (2015) 「「ポスト人口転換期」の出生動向：少子化の経緯と展望」『人口問題研究』第72巻第2号, pp.86-101.

打越文弥(2018) 「夫婦世帯収入の変化から見る階層結合の帰結」『家族社会学研究』第30巻第1号, pp.18-30.

大竹文雄 (2001) 『雇用問題を考える』東京大学出版会.

落合恵美子(2013) 「近世世界の転換と家族変動の論理：アジアとヨーロッパ」社会学評論第64巻第4号, pp.533-552.

金美蘭 (2002) 「ジェンダー意識と教育アスピレーションの分化」中村高康・藤田武志・伸編『教育から見る日本と韓国:学歴・選抜・学校の比較社会学』東洋間出版社: 221-236.

【각종 통계자료】

베네세 교육종합연구소(2005) 「유아 생활 설문조사아시아5개 도시 조사2005」

세계경제포럼(각 연도)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일본 내각부가 (2006) 「저출산 사회에 관한 국제의식조사」

일본 내각부(2018) 「일본과 외국 여러 나라의 청년 의식에 관한 조사」

일본 내각부 (2022) 「Society 5.0 실현을 위한 교육 인재육성에 관한 정책 패키지 개요」

일본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 조사」 각 연도

한국 통계청 (각연도) 「근로형태별 취업자」

한국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통계청(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한국통계청(각 연도) 「인구동태」

한국보건복지부(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후생노동성(각 연도) 「의사·치과의사·약사 통계」

후생노동성(각 연도) 「인구동태통계」

총무성 통계국(각 연도) 「노동력 조사」

OECD(2020) 「Family indicators, Share of birth outside of marriage」

OECD (2022) 「Fertility rates(indicator) by year」

OECD(2022) 「Population with tertiary education」